

 <b>국토교통부</b>	<b>보도참고자료</b>	
	<b>배포일시</b>	<b>2018. 10. 31(수) / 총 2매(본문2)</b>
<b>담당 부서</b>	<b>도시재생정책과</b>	<b>담당자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윤의식 과장, 김태훈 사무관, 김태홍 주무관</li> <li>• ☎ (044) 201-4949, 4905</li> </ul>
<b>보도일시</b>		<b>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b>

## "도시 살린다던 '문재인 뉴딜' 예산집행은 1%대 그쳐" 보도 관련

- 도시재생 사업은 먼저 지역주도로 주민이 참여하여 사업계획(재생 활성화계획)을 수립한 후, 이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일정한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.
  - \* 사업공모(약 3~4개월 소요) → 활성화계획 수립(약 7~8개월 소요) → 도시재생 특위 심의(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) → 사업비 집행(약 3~5년 계속집행)
- 뉴딜 시범사업('17년 68곳 선정)도 사업공모('17.9.25~12.14), 지자체별 활성화계획 수립('18.1~7월) 등 약 1년의 면밀한 준비를 거쳐 금년 9.3일부터 예산이 교부(1차분 1,839억원)되기 시작하였습니다.
  - 현재 각 지자체는 보상협약, 부지매입, 설계 및 착공 등 단계적으로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 중으로, 앞으로 지역별 착공과 함께 예산 집행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.
    - \* 현재 지자체에서 796억원의 집행계획('18년 신규사업 예산 2,527억원의 31.5%)을 제출했으며, 지자체와 협의하여 추가 집행사업을 발굴하여 집행률 제고 추진
- LH 등 공기업의 투자는 뉴딜사업지 증가('17년 68곳 → '18년 167곳), 사업참여 확대에 따라 그 규모가 점차 증가될 전망입니다.
  - LH공사의 경우는 '18년에 7곳의 뉴딜사업(경남통영 복합단지 건설 사업, 경남김해 임대주택 사업 등)에 참여하여 678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연말까지 전액 집행할 계획입니다.(10월말 현재 634억원 집행)

○ '19년부터는 총 32곳의 사업(충북청주 청춘 허브센터 구축, 경기광명 어울림플랫폼 조성 등)에 참여하여 투자규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.

\* 공기업 투자는 SH, 부산도시공사 등 4개의 지방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, 코레일, 한국지역난방공사, 한국관광공사 등이 참여하며 확대 추세에 있음

□ 아울러, 도심 활성화를 위한 복합개발사업, 상가 리모델링, 주차장 확충, 창업공간 임대 등의 민간 재생사업 활성화에 저리의 주택도시기금을 용자해 주고 있습니다.

○ 현재까지 용자상담, 심사, 승인을 받은 사업 수요 금액이 약 13,843억원 규모로 실제 수요자들에게 용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를 통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.

□ 국토부는 지자체, LH, HUG 등과 함께 뉴딜 사업의 추진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,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정례적인 집행점검회의 등을 통해 사업을 중점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.

\* '18.10.31, 국토부 1차관 주재 시·도 부단체장 회의 개최

○ 체계적인 사업관리와 함께 사업 추진성과에 따라 집행 예산을 차등배정하는 등 예산집행 인센티브를 강화하고,

○ 도시재생사업의 예산 집행 속도를 높이고,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한 관련 법·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.

\* 공모절차 없이 지자체의 활성화계획을 수시로 신청받아 도시재생특위 심의를 거쳐 사업비를 지원하는 “즉시 착수” 시스템 도입, 사업선정(지구지정)과 사업 시행계획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“패스트트랙” 방식 도입 등

< 관련 보도내용 (조선일보, 10.31) >

- 5년간 50조로 도시재생 500곳 재생사업, 추진한 곳은 16곳뿐, 올해 예산 1.6%만 쓰고, 52개 지역은 단 한푼도 못써
- 연 3조원이라던 공기업 투자 '0원'



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정책과 김태훈 사무관(☎ 044-201-4949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